

## 대구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한다

7월부터 전국 광역 지자체 첫 '계속 고용' 정책 시행  
2자녀 1년·3자녀 이상 2년...정년 연장 논의 '신평탄'

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2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

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직은 과거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으며 기관별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종사한다. 대구시는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최초"라고 밝혔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 "전국적 시행 여부는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무현 기자 pmang@kyongbuk.com



힘과 힘의 격돌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달성강변아구장 옆 하천부지에서 열린 '제22회 달성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예선에 출전한 싸움소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정훈진 기자 jh131@kyongbuk.com

## 배추·당근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부, 2%대 물가 안정 안착

정부는 배추, 양배추, 김(마른김·조미김)을 비롯해 고춧가루 7개 품목에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섰다. 특히 배추와 양배추는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상당

폭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전방향을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부문별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2면에 계속 김경모 기자 kjm@kyongbuk.com

## 포항 구룡포·장기 해역에 '바다숲' 조성

포스코·해수부 등 4개 기관, 블루카본·수산자원 증진 MOU 체결

포스코와 해양수산부가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바다숲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자는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해양 생태계에 흡수돼 격리·저장되는 탄소를 말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2027년까지 국

비 10억 원·포스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남구 구룡포읍 구룡1리와 장기면 모포리 해역에 2.99km<sup>2</sup>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후 광양권역까지 협력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바다숲 조성에 활용되는 철강부산물 은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어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수산자원을 단기간에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협약기관 중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금까지 국내 245개소 약 317km<sup>2</sup>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이시우 포스코 사장·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소장 등 해당 기관장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도형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우 사장은 "포스코는 포항·여수·울릉 등 제철소 인근 국내 바다사막화 해역에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바다숲을 조성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해 왔다"며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성공적인 민·관·연 협력 바다숲 조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lij714@kyongbuk.com

## '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 의정갈등 돌파구 찾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의료계 보이콧에 실효성 한계 정부, 의협·전공의 참여 호소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관련기사 3·19면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

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다.

정부가 아직 참여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제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모 기자 kjm@kyongbuk.com

尹 대통령-홍준표 시장과 밀월 모드 4면 | 박정희 대통령 삶의 흔적 한자리에 7면 | 대구銀 'M뱅크'日서도 간판결제 10면



# 구미의 미래 100년

# 구미시의회가

#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구미시의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gumici.or.kr](http://www.gumici.or.kr)  GumicityCouncil